

시민기록에 대한 개념적 고찰*

An Study on the Concept of Civic Records

윤은하(Youn, Eunha)**

1. 들어가며
2. 민간기록과 시민기록
 - 1) '민(民)'의 개념적 변천과 시민의 등장
3. 서구 시민사회의 발전과 시민 개념의 등장
 - 1) 시민과 시민권의 발달: 고전적 자유주의 관점
 - 2) 시민권 개념의 발전과 시민기록: 공화주의적 관점
 - 3) 문화적 시민권과 시민기록관리: 포스트모던적 관점
4. 국내 시민사회 활동의 전개와 시민기록
 - 1) 시민 운동의 발전과 시민기록
 - 2) 마을만들기 운동과 시민기록
5. 나가며

* 본 논문은 2022년 전북대학교 연구기반조성비에 의해 수행된 연구임.

** 전북대학교 대학원 기록관리학과 부교수, 문화융복합 아카이빙 연구소 연구원(eunha.youn@gmail.com)(제1저자).

■ 투고일: 2023년 06월 28일 ■ 최초심사일: 2023년 07월 05일 ■ 최종확정일: 2023년 07월 20일.

■ 기록학연구 77, 75-107, 2023, <https://doi.org/10.20923/kjas.2023.77.075>

〈초록〉

최근 다수의 지자체에서 민간기록 대신 시민기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본고는 구체적으로 민(民)을 포함한 여러 단어들이 현대 한국 정치 및 사회에서 어떻게 이해되고 사용되었는지, 그 개념적 변천에 대해 한국 사회의 사회적 변화와 연관 지어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민간기록이 아닌 시민기록으로 명명하는 것에 대한 개념적 함의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역사적으로 민(民)과 대비되는 의미로서 시민(市民)의 개념에 대해 이해하고, 둘째 시민권의 일부로 시민기록관리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 살펴본다. 나아가 결사체 시민운동의 관점에서 마을 만들기와 공동체 운동을 살펴보고 이러한 활동을 통해 시민이 일상에서 생산한 시민기록의 정치·사회적 의미에 대해 고찰해보기로 한다.

주제어 : 민간기록, 시민기록

〈Abstract〉

In recent discussions on civil records, the term citizen records is being used instead of civil records.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implications of using the term 'citizen record' instead of the term 'civil record'. Specifically, this paper examines how various words, including min, are understood and used in modern Korean politics and society, and the conceptual changes in relation to social changes in Korean society, so that we can name them civil records rather than civilian records. We want to find out the conceptual implications of what we do. To this end, first, we understand the concept of citizen as a historical contrast to the people, and second, we examine the meaning of citizen record management as part of citizenship. Furthermore, from the perspective of associational civic movements, we will look at village development and community movements, and consider the political and

social meanings of civic records produced by citizens in their daily lives through these activities.

Keywords : Civic records, records management

1. 들어가며

최근에 민간기록관리에 대한 저변이 확대되면서 시민기록이라는 용어가 빈번히 사용되고 있다. 민간기록관리와 민간기록활동가 대신 시민기록기록관리 혹은 시민기록활동가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지자체의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기록물과 활동가를 가리키는 용어를 넘어 점차 민간 기록관 자체, 즉 시민기록관의 설립과 등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2019년 전주시가 최초로 시민기록관이라는 명칭으로 민간 영역에서 생산한 기록물을 관리하는 기록관을 설립한 이래¹⁾, 최근 청주시에서도 민간기록관이 아닌 시민기록관을 개관하였다. 2022년 청주시 역시 청주시민기록관 개관식에서 청주시장은 시민기록관의 건립 목적에 대해 “시민들의 기억을 기록으로 남겨 지금의 청주를 후대에 전하기 위한 방편으로 시민기록관을 건립, 많은 시민이 시민기록관을 방문해 옛 추억도 떠올리고 지금의 청주도 남기는 작업을 하고자 한다.”고 시민기록관의 설립 취지를 밝혔다(연합뉴스, 2020).²⁾

1) 연합뉴스, “전주의 기억, 시민의 삶…시민기록관 10일 개관,”(2019. 12.2); 뉴스스, “시민기록물, 가치·의미를 찾는다, 전주시 시민기록포럼”(2020.11.22.)

2) 2022년 12월 22일 오후 2시 청주시기록원 광장에서 열린 개관식에는 이범석 청주시장과 변광섭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차재근 지역문화진흥원장, 민간기록물 기증자, 기록활동가 등 100여 명이 함께해 개관을 축하했다. 청주시는 시민기록관의 설립을 통해 청주시민들이 민간 영역에서 생산한 기록물을 시민기록으로 명명하고 시민의 일상과 생활, 정치와 여가에 관한 기록물을 수집, 보존하고자 하는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다. 뉴스로 「‘시민기록의 꽃’ 청주 시민기록관 개관」, (2022. 12.22)

서울기록원도 소장 전시 콘텐츠를 설명하며 “서울시의 공공기록부터 시민기록까지를 아우르는 기록전시”³⁾라고 민간기록 대신 시민기록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김제시는 민간기록교육을 시민기록가 양성과정으로 표현했고, 증평군은 2021년 『증평군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시민기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증평군의 정책방향성을 설명했다. 또한 전북 익산시와 평택시, 순천문화재단과 당진시, 인천 미추홀구에서도 각각 ‘시민기록활동가 양성과정’, ‘시민기록가 양성 아카데미’, ‘미추홀 시민아카이브’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시민기록교육과정을 홍보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우리는 현장에서는 시민기록이라는 용어가 이제 전혀 생소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뿐 아니라 기록학계에서도 점차 현장에서 이러한 용어의 사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⁴⁾ 그렇다면 이 두 용어, 민간기록이라는 용어와 시민기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

이제껏 우리는 이러한 사적 영역에서 생산된 기록물을 민간기록이라

3) 사실상, 전국의 지자체 및 다양한 민간기록 수집 및 공모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민간기록과 시민기록이라는 용어를 구분하지 않고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서울기록원, ‘서울기록원 전시’, 홈페이지 <https://archives.seoul.go.kr/>; 전북도 민일보, ‘김제시 시민기록가 양성과정 수강생 현장교육,’(2022.6.2.); 익산신문, ‘익산시, 기억이 기록되는 시민활동가 육성,’(2021.9.10.); 열린뉴스통신, ‘2022 평택시 시민기록활동가 양성과정 모두 마쳐,’(2022.11.14.); 미추홀학산문화원, 미추홀 시민아카이브 홈페이지 <https://www.archivecenter.net/MichuholCA/>; 2021년 국가기록원 기록관리 이슈페이퍼에서도 안동시와 경북기록문화연구원에서는 2017년부터 매년 2회 ‘경북시민아카이비스트 아카데미’를 개최하였다고 소개하고 있다(국가기록원, 2021)

4) 본 저자는 2022년 출판한 「국내 민간기록관리 활성화를 위한 체계 연구」에서 민간 기록이 아닌 시민기록이 가지는 장점과 의미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윤은하, 2022); 한신대 이영남 교수와 전 서울기록원 조영삼 원장은 2021년 국가기록원 「민간분야 기록관리 활성화를 위한 정책 용역연구」 인터뷰에서 시민기록의 의미에 대해 언급한 바 있고(국가기록원, 2021) 아카이빙네트워킹위원장인 손동유도 ‘시민아카이브의 제자리찾기’라는 이름의 강연을 전주시민기록포럼에서 한바 있다. 현재 전주, 서울, 청주를 비롯한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민기록관, 시민기록활동가, 시민기록 공모전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민간기록과 민간기록활동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손동유, 2020)

고 불러왔다. 2021년 개정된 「국가기록원 훈령」에 따르면, ‘민간기록물’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생산·취득한 기록정보자료’로 규정하고 있는데, 민간기록은 중앙 정부, 지자체 및 정부산하 기관 등의 공공 영역 이외 속하는 기관 및 개인이 생산하거나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을 의미한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민간(民間)’이라는 단어의 정의는 ‘관청이나 정부와 같은 공적 영역에 속하지 않는 영역’을 지칭하는 것으로 ‘일반 서민들 혹은 일반 백성들’이라는 의미를 지닌다.⁵⁾ 민간이라는 용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민간인’은 군인이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의미하고, ‘민간 자동차’는 군용이나 공공 교통이 아닌 개인이나 상업용으로 사용되는 차량이며, ‘민간업체’는 정부가 소유하지 않은 기업을 의미한다. 즉 ‘민간’은 일반적인 의미에서 국가나 정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사적인 영역을 의미하는 용어로 이해되는데, 민간이라는 개념이나 개체의 본질을 직접적으로 정의되기보다는, 대립되는 단어의 특성이나 특징적인 측면을 부정하여 설명된다. 즉, ‘민간’은 사전적으로 ‘공공이 아닌 것’ 혹은, ‘공적의 영역에 속하지 않는 영역’으로 정의되는 특성이 있다.⁶⁾ 따라서 우리는 이 단어의 사용이 한국 사회의 발전과 민주주의적 성장의 과정을 겪은 시민의 기억을 담지하는 증거로서 기록이 가지는 고유의 함의를 내포하고 있는가의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구체적으로 ‘민(民)’을 포함한 여러 단어들이 현대 한국 정치 및 사회에서 어떻게 이해되고 사용되었는지, 그 개념적 변천에 대해 한국 사회의 사회적 변화와 연관지어 논의함으로써 우리가 민간기록이 아닌 시민기록으로 명명하는 것에 대한 개념적 함의를 알아

5) 이에 더해,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백성」이란 나라의 근본을 이루는 일반 국민을 예스럽게 이르는 말로 정의내리고 있으며, 「서민」이란 아무 벼슬이나 신분적 특권을 가지지 못한 일반사람을 일컫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다.

6) 국어학에서 이러한 정의를 설명하는 방식을 부정적 정의라고 표현한다. 민간은 부정적 정의어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민간의 정의에는 민간이라는 영역의 본질적인 속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역사적으로 민(民)과 대비되는 의미로서 시민(市民)의 개념에 대해 이해하고, 둘째 시민권의 일부로 시민기록관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살펴본다. 나아가 결사체 시민운동의 관점에서 시민기록을 살펴보고 마을만들기와 공동체 운동과의 접점에서 시민기록의 정치·사회적 의미에 대해 고찰해보기로 한다.

2. 민간기록과 그리고 시민기록

1) ‘민(民)’의 개념적 변천과 시민의 등장

정세근은 2022년 그의 논문 「사람의 뜻(3): 국민, 시민, 인민 등의 개념과 용례」에서 역사적으로 ‘민(民)’은 천민(賤民)을 가리키는 용어로 쓰였다고 말한다. 예로부터 민(民)은 하층계급을 가리키는 말로 유교적 질서에서 ‘경(卿), 대부(大夫), 사(士)’에 속하지 않는 사람을 민(民)이라 칭했다고 말한다(정세근, 2022). 19세기 중기까지 민(民)으로 불리는 사람들은 왕의 은덕으로 사는 존재이며 왕에게 속한 자들을 의미했는데, 대개 보호받아야 할 존재로 주권이 없는 자들이었다. 고종 집권 초기에도 민(民)은 적자(赤子)로, 그 뜻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라는 의미로 쓰였다고 보고되고 있다. 정성호는 1938년 문세영이 발간한 최초의 우리말 사전을 인용하여 시민과 백성의 뜻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정성호, 2013 재인용).

- ① 시민(市民): 시내에 사는 백성
- ② 국민(國民): 같은 국적을 가지고 있는 인민, 백성
- ③ 백성(百姓): 관직 또는 관작이 없는 사람. 국민, 인민
- ④ 시정(市井): 시내에서 상업을 하는 사람. 시민(市民)

즉, 민(民)에는 임금이 갓난아이처럼 여겨 사랑한다는 뜻으로, 그 나라의 '백성'을 이르던 뜻이 내포되어 있다. 왕은 어버이이고 민(民)은 자식으로, 민(民)은 어버이인 왕의 보호가 필요한 피지배층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었다(이지성, 2021). 이는 조선시대의 민본주의의 사상 안에서 정치적 주체와 권리에 대한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민(民)이 들어간 단어들은 여전히 봉건적 지위와 종속적 태도를 가진 존재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정의한 '민간(民間)'은 '일반 백성들 사이'로 더 정확한 의미는 '민(民)으로 일컬어지는 사람들 사이에, 혹은 그 간에'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일제 강점기에 민(民)이라는 단어는 '억압받는 민중', 혹은 '민중의 반란봉기' 등과 함께 자주 등장한다. 근대시기까지 민(民)과 동의어로 인식되던 백성과 평민, 민중 등의 단어는 상하대립을 상징하고 아래, 피지배층의 해당하는 단어로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일제 강점기 역시 이러한 민(民)을 개념적 특징을 이어받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정성호, 2013). 당시 민중은 지배층과 피지배층에 의해 모두 사용되었지만 그 용례를 살펴보면 모두 지배층과 특권층에 대비되는 피지배층을 지칭하는데 사용되었다. 해방 이후에도 이러한 경향은 계속되었는데 1960년대 이르기까지 민중(民衆)은 모두 특권층에서 배제된,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를 의미했다(이나미, 2014).

1960년대 이후 학생운동에서 자주 사용했던 민중 개념이나 기독교 민중 신학에서의 민중은 변혁 주체였지만 동시에 계급적 의미를 지니는 단어였다. 이나미는 1970년대와 1980년대를 거치며 한국시민사회에서는 민중 담론이 주도했는데, 이때의 '민중이라는 의미 노동해방주체, 민족해방주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민중은 사회경제적 차원에서 소외된 노동자, 농민, 소규모 자영업자 등을 통칭하는 용어를 의미했다고 분석했다(이나미, 2014). 즉, 민중이라는 용어는 시민과 달리 억압받고, 착취

받으며, 소외된 자라는 계급적 의미가 강하게 내포되어 있다.

이러한 민중이 가지는 의미에 반해, 시민(市民)이라는 단어는 그 시초가 되는 1910년 경술국치(庚戌國恥) 이전까지 시전상인의 지칭하는 단어로 사용되었다(정성호, 2013). 정성호는 조선왕조실록에서는 시민은 육의전 또는 시전의 상인을 가리키는 단어로 쓰였으며 이후 1920년대 개화를 거치면서 시민 개념의 외연이 확장되기 시작했다고 말한다. 개화기 때 시민은 일본유학을 다녀온 진보적 지식인에 의해 서구의 근대사회의 맥락에서 형성된 시민의 개념이 소개되었는데 당시 일본제국주의에 맞선 자주독립의 수호와 자유·민권에 대한 의식이 고취되면서 독립적이고 저항적인 정치적 주체로서의 시민의 개념이 점차 사회전반으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이후 대한민국이 성립되면서 초·중·고 사회과 교과목에서 등장하는 시민 개념이 서서히 대중화되었다고 한다(정성호, 2013).

그럼에도 사실 오랜 기간 한국의 민주화 운동은, 시민이라는 관점보다 민중과 노동계급이 민주화운동의 주체 세력으로 인정해왔으며 시민의 역할에 대해서는 지극히 부정적인 태도를 취해왔다고 알려져 있다. 소위 진보진영에서는 시민을 ‘자산과 교양을 갖춘 이기적 계급’, ‘기회주의적이며 반동적인 속성을 갖는 서구의 잔재’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시민의 정치사회적 변혁 주체로서 가지는 잠재력에 대해 끊임없이 부정해왔다. 서구에서 시민이 사전적으로 시(市)에 사는 사람, 국가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 나라 헌법에 의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자유민의 의미가 강조되었던 데에 반해, 국내 정치 환경에서는 노동계급과 대립되는 경제적으로 중산층 이상이며, 교육을 받은 지식인을 의미했기 때문에 1980년대까지 시민은 그리 환영받지 못했던 용어이자 집단이었다(김원 2011).

이렇듯 1960년대 이후 민주화운동에서는 시민보다는 민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계급의 관점을 투영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최근 노동계

급적 중심의 운동이 약화되면서, 그리고 시민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의 다양성에 대한 인식이 확장되면서 시민의 개념에 대한 새로운 조명이 이루어지고 있다. 2009년 정치학자 최장집은 그의 책 『민중에서 시민으로』에서 “시민적 민주주의에서 핵심은 정당과 선거를 중심으로 일상적 참여를 하는 적극적 시민”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민중에서 시민으로』에서 정치주체로서 민중에 대한 특권적 시각을 내려놓고, 노동자와 노동운동의 한계를 언급했다. 오히려 보편적 시민의 개념 안에 노동자를 포함하여 이해해야 한다고 말함으로써 시민의 등장과 역할에 대해 새롭게 조명했다. 즉, 최장집은 다양한 시민 세력을 인정하며 적극적 시민의 정치적 참여를 강조함으로써 변화하는 시민사회에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 이때 그의 시민의 용례는 계급의 관점에서 벗어난 다양성, 자율성, 독립적 주체로서의 정치적 의미를 가지는 존재로서 이해될 수 있다(최장집, 2009).

이렇듯 시민의 개념은 한국사회에서 특수한 변화의 시기를 겪는다. 시민개념의 등장과 발전은 역사적으로 정합적으로 발전되어 온 것이라기 보다는 실제로는 여러 사건을 거치면서 한국사회에서 포용되고 배제되면서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민중 담론 지형 속에서 저항하고 참여하는 주체적 주체로 시민의 등장은 4·19 시민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 정성호는 한국 사회에서 시민의 강조는 4·19 시민혁명을 기점으로 확장되었고, 5·18 민주화혁명으로 더욱 확고해졌다고 평가했다. 즉, 4·19를 거치면서 국내의 시민들은 서구의 근대적 시민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 주체로 스스로를 인식하기 시작했고 자신들의 시위를 시민혁명으로 당당히 인식했는데, 정성호에 따르면 이후 모든 시민은 불의한 정치에 대해 저항권을 가지고 억압과 불법에 대항하는 시민의 권리를 스스로 실천하면서 성장했다. 정성호는 시민의 성장과 시민개념의 본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정성호, 2013).

“시민개념은 그 어떤 개념보다는 치자와 피치자의 간극을 좁혀
하게 인식하며 그 거리를 줄이고자 애써왔다… 4·19, 5·18을 거치
면서 시민들은 자신들이 여기에 직접 참여하였다는 공동의 경험에
근거한 시민 정체성의 획득했다…(중략) (이렇듯) 시민은 전통적인
민중, 인민, 국민들 같은 근대적 주권 국가 하의 유기체적인 개념보
다 탈근대적인 존재양식인 자율성, 관계성, 다양성, 아래로부터의
능동성, 유동성, 불확정성을 더 정확히 표현하는 개념이다. 특히 어
떤 분야의 전문가보다 일반 시민들의 다양한 경험과 정보, 지식과
이해를 반영하기 위한 아래로부터의 상향식 참여와 투입(input)민
주주의를 핵심적 덕목으로 강조하고 있다(정성호, 2013).”

따라서 독립적이고 저항적 시민의 등장과 활동은 시민민주주의의 성
장의 핵심적인 요소이며 한국사회에서 민주주의 발전사와 그 궤를 같
이 하는 생동적인 주체의 등장으로 이해할 수 있다.

4·19, 5·18, 그리고 6월 항쟁, 더 나아가 촛불시민 운동을 통해 저항
하는 자율주체의 탄생으로 시민과 시민의 일상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민간기록이 아닌 시민기록으로 시민의 탄생을 증거하고 그들의 삶과
노동을 기록하고 남기고 보존해야 한다는 주장에 좀 더 타당성을 부
여할 수 있다. 시민기록으로 명명하는 것은 시민이라는 용어에 내포되
어 있는 시민민주주의의 자산을 드러내고 국가의 작동과 공적 권위에
대한 저항을 그대로 간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를 통해 시민기
록은 단순히 민(民)이 아닌 시민(市民)으로 스스로가 변모하는 과정과
그 발전의 역사를 그대로 증거하고 보여줄 수 있는 증거가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시민기록은 단순한 명칭 변경 이상의 적극적 의미
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즉, 이는 무엇보다 시민을 바라보는 관점과 그
들이 생산해 놓은 기록을 바라보는 관점과 관련이 있다. 민간기록이라
는 용어는 ‘민간 생활과 결부된 기록’이라는 이상의 의미를 담기 어렵
다. 왜냐하면 ‘공적인 것이 아닌 것’으로 정의되는 민간의 정의에 기반

한 기록은 사실상 공적인 기록이 정상의 지위에 놓이면서 민간기록은 공적인 것의 바깥에 존재하는 어떤 것으로 여겨지도록 하기 때문이다. 현존하는 기록생태계에 적용하면, 민간기록을 공공이 아닌 것, 즉 공공의 바깥에 있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은 공공에 대해 민간기록을 타자화시키는 것이며, 정상기록으로 공공기록을 간주하고 공공기록의 결락보충재 전도로 민간기록의 폄하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기록이 가진 시민사회적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좀더 적극적 의미를 갖는 단어를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공공이 아닌 단순히 민간 영역에서 있었던 풍물이나 풍속을 담지한 기록을 의미하는 용례가 아닌, 시민으로서의 다양한 경험들, 시민 문화와 가치를 남기고 강화하는 도구로서 기록이 가지는 의미를 가지는 단어를 찾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시민과 시민민주주의가 실천적 운동의 주체로서 존재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시민의 기록이 필요하다는 점 또한 분명히 할 수 있다.

3. 시민, 시민권 개념의 발전과 시민기록

이영남은 ‘민간기록을 시민기록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것은 민간기록에 대한 일종의 표준화된 국가주의적 접근을 거부하는 것이며 개별 주체인 시민에게 기록관리를 시민의 권리로써 일상생활의 일부로 여기게 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한다(전북대학교, 2021). 즉 시민에게는 시민의 권리로써 국가에게 시민 아카이브와 시민기록관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이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시민권의 일부로 시민기록관리가 이해될 수 있는 이론적 기반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고전적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시민권으로부터 현재 문화적 시민권의 의미에 이르는 시민권의 변화과정과 기록관리 역할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 시민과 시민권의 발달: 고전적 자유주의 관점

서구에서 시민이란 개념은 국가 내에서 법적 그리고 정치적 권리를 가지고 있는 개인의 등장과 함께 시작되었다. 즉, 시민들은 소속된 국가 내에서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법과 제도에 따라 사회적으로 행동하고 또 참여하는 존재이다. 시민이라는 개념은 근대국가에 의해 정교화되고 제도적으로 정착되었지만 그 기원을 찾아 올라가면 고대 그리스의 폴리스(polis)로부터 찾을 수 있다. 마이클 에드워드(Michael Edwards)는 그의 책, 「시민사회」에서 서양 고전 사상 속에서 시민의 기원을 두는데, 예를 들어 아리스토텔레스의 폴리스는 시민들—혹은 시민의 자격을 갖춘 개인들—이 스스로를 지배하는 동시에 지배를 받는 국가였고 이러한 이유로 시민의 기원은 민주주의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 고대 그리스에 있다고 말했다(Edwards, 2018). 즉, 시민들 스스로가 덕성을 갖추고 시민으로서 부여받은 임무들을 공유하고 있었으며 정치적으로 수동적이고 복종적인 존재가 아닌 의식적이고 적극적인 권리 주체로 인식되었다.

그리스에서 시민의 기록은 메트론(Metroon)에 설치된 아카이브에 보관되어 있었다. 아테네 시민들은 자신들의 중요한 기록들을 재판관이 모여 회의를 하는 아에로파고(Aeropago)에 보관했는데 당시 아에로파고에 설립된 공공 아카이브는 개방 아카이브로 시민의 모든 기록을 보관할 뿐 아니라 아테네 시민들 누구나 접근할 수 있었던 장소였다(Posner, 1972). 아에로파고라는 시민 아카이브를 통해 시민들은 도시국가 아테네의 정치와 행정, 의사결정 과정을 알 수 있었으며 스스로의 정치적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었다. 아카이브는 시민의 덕성을 갖추는데 중요한 도구였는데, 자신의 기록을 생산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고 자

유롭게 접근하는 것은 시민의 기본적인 권리였다. 노명환은 그리스의 시민들은 공동체의 모든 사항들에 관한 정보를 아에로파고에 설치된 아카이브에서 자유롭게 얻었다는 사실이 시민의 덕성과 그리스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강조한다. 그에 따르면, 시민들 간 이루어진 사적인 거래에 관한 기록들도 아카이브에 보관되었는데, 시민들은 공적, 사적 기록들을 자유롭게 생산했고 관리했으며 그들이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었다(노명환, 2010). 고대 그리스에서는 시민의 일상 속에 기록이 존재했고 시민성을 유지하고 확보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아카이브가 있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시민으로서 정치적 결정을 하는데 아카이브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기록은 역사적으로 시민의 탄생과 시민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기반으로 존재해왔고 그 기원은 고대 그리스, 시민의 탄생으로 거슬러 올라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시민과 기록의 관계는 중세 시대의 기록관리를 살펴보면 더 분명해진다. 중세시대에 생산되었던 기록들은 중세 봉건통치의 계급적 특권을 뒷받침했던 기록들이 주류를 이룬다. 이들 중세인들은 스스로의 기록을 생산할 수 없었으며, 자신들의 기록에 접근할 수 없었다. 중세의 기록들은 봉건적 특권을 확장하고 유지하는 통치 수단이었으며 대개는 비밀스럽게 생산되고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은폐된 공간에 저장되었다. 중세의 기록은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시민을 계급적 이해구조 속에 가두는 수단으로 이용되었고 시민의 권리에 반하는 방식으로 생산되고 수집, 관리 활용되었다. 때문에 중세 사회를 시민 사회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중세 기록을 시민기록이라고 부를 수 없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이후 시민권의 개념은 서구에서 산업혁명을 지나며 시민의 정치적 권리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며 현재의 의미로 정착했다고 할 수 있다. 즉 프랑스 혁명과 미국 혁명의 결과 전통적인 정치 패러다임이 붕괴하

면서 근대 국가를 건설했던 부르주아지들은 국가에 대해 법적 권리를 주장했다. 시민은 이러한 특정 국가 내에서 정치적, 법적 권리를 갖는 주체로, 시민권은 이러한 시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로 참정권이나 선거권 혹은 피선거권과 같은 정치적 권리로 이해되었다. 1789년 프랑스 혁명의 「인간 및 시민의 권리선언」에서 등장하는 시민은 자유, 평등, 저항권, 정치적 권리, 소유권 등을 가진 주체로 인정되었다. 다시 말해, 시민은 자유를 누리는 동시에 자신의 의사와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는 존재로, 정치적 권리를 누리며 국가와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존재로 규정되었다. 마르크스 역시 「유태인 문제에 대하여」에서 시민을 근대국가 구성인으로, 시민권은 근대 국가의 범주 내에서 정치적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이 지니는 권리로 기술하고 있다(장미경, 2001).

프랑스 혁명은 근대적 시민을 탄생시켰을 뿐 아니라 시민기록 탄생의 변곡점이 된다. 혁명은 근대적 시민을 만들어냈을 뿐 아니라 시민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로 기록에 관한 권리가 있음을 천명했다. 즉 혁명은 시민들이 국가로부터 자신들의 기록을 생산하고 접근할 권리가 있음을 선포했는데, 조청현에 따르면, 혁명력 2년 메시도르 7일 법령의 37항에는, ‘모든 시민은 아카이브의 비공개된 자료를 열람할 권리가 있을 뿐 아니라 모든 시민은 아카이브에 소장된 문서의 생산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또한 문서의 열람에 있어서 비용을 청구할 수 없으며 적절하고 신중한 감동을 행사하면서 모든 시민에게 공개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조청현, 2006). 혁명은 국가가 시민들에게 기록에 대한 자유로운 열람권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라는 사실과 시민의 스스로에 대한 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시민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임을 명백히 했다. 이 후 시민과 기록은 그 궤를 같이 하며 함께 공존하였고 기록의 생산과 접근에 대한 권리는 시민권의 일부분으로 국가로부터 보장받아야 할 적극적인 권리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시민의 권리로서 기록관리의 관점을 좀더 구체화시키기 위해 시민의 권리, 즉 시민권(citizenship)이란 무엇이고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에 관한 좀 더 깊이 있게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시민권이란 국가를 구성하는 시민들에게 보편적 권리이자 자격권을 의미한다. 시민의 등장과 마찬가지로 시민권의 연원 역시 고대 그리스로 비롯되며 도시국가에서 시민권자로 인정받은 사람들이 폴리스에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면서 시작했다고 알려져 있다. 로마 시민이나 아테네 시민, 더 나아가 미국 시민과 같은 용어는 특정 국가를 염두에 둔 법적 개념이다. 시민권이란 특정 국가에 소속된 구성원들만이 누릴 수 있는 법적인 기본 권리를 의미한다. 근대 사회에서 부르주아지에 의해 시민사회가 등장하며 실질적인 통치원리로 부상하면서 시민권의 의미는 시민의 권리를 평등하게 실현하고 참여하는 ‘보편적 권리이자 자격권’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⁷⁾

그럼에도 장미경은 이러한 시민권의 개념은 시민혁명 이후 등장한 노동계급의 권리나 20세기 이후 급성장한 여성과 흑인 등 다양한 이해 집단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는 소극적이었다고 말한다. 이는 식민지 민중이나 동성애자들, 여성과 소수자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새로운 개념의 시민권, 즉 전통적인 선거권을 넘어선 다양한 시민권에 대한 요구가 점차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장미경, 2001). 설한은 「다원주의 사회의 민주적 시민성」이라는 논문에서, 자유주의적 전통에서 시민권은 점차 형식적이고 법적인 신분보장의 의미로 축소되었고 이념적으로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강조할수록 사회 구성원의 공통의 관심사로부터 멀어졌다고 말한다. 그는 국가가 일방적으로 부여하는 위로부터의 시민

7) 장미경은 이를 자유주의적 시민권이라고 부른다. 이에 따르면, 자유주의적 시민권은 근대초기 부르주아의 권리를 반영해 만든 개념으로 남성 중심의 부르주아 계급의 권리에 기초하고 있으며 국가로부터 부여되는 권리 개념에 한정되어 있다. 이에 노동계급을 비롯한 기타 소수 집단의 권리적 측면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장미경, 2001).

권의 개념은 점차 시민의 관심사에서 멀어지면서 시민 참여와 활동이 점차 줄어들게 되었고 그 결과 새로운 형태의 시민운동이 출현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설한, 2013).

2) 시민권 개념의 발전과 시민기록: 공화주의적 관점

자유주의적 시민권의 개념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제안된 이론이 공화주의적 관점에서의 시민권이다. 공화주의적 전통은 권리보다 의무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데, 시민은 시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기 위해 공공의 이해를 추구하는 덕성을 가져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기록관리의 관점에서 이는 시민의 기록 관리가 단순히 민간에 존재하는 개인의 호고적 취미가 아닌 시민의 권리로 시민은 스스로 생산, 수집, 관리할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시민은 국가에 시민기록관리와 아카이브에 대해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공화주의적 관점에서 시민기록이라는 용어는 좀 더 대한민국 건국 이후 시민 사회의 형성과 그 속에서 독립적이고 의식화된 개인의 정치적 권리와 요구라는 정치적 함의를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국가기록원의 「민간영역 기록관리 활성화를 위한 정책 용역」의 인터뷰에서 이영남은, “민간기록이 아닌 시민기록이라는 용어 속에는 인권의 관점, 그리고 정치적 주권의 관점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는 시민기록은 시민사회의 등장과 성장의 증거로서 개인과 공동체의 기록을 바라보고 시민의 권리로 기록관리를 이해한다는 시민의 기록에 대한 정치적 주권을 행사한다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 그리하여 민간기록을 시민기록으로, 또 민간기록관리를 시민기록관리로 여긴다는 것은 국가 아카이브와 달리 시민기록을 시민의 권리적 측면에서 접근한다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전북대학교, 2021). 더불어 공화주의적 관점에서는

시민은 적극적으로 스스로의 시민성을 증명할 수 있는 기록을 생산해 내어야 하며 이를 관리하고 보호받아야 할 의무를 지닌다. 시민기록의 생산과 관리, 그리고 접근과 활용은 시민의 의무인 동시에 권리가 된다. 때문에 국가에 대해 시민은 기록과 관련된 제반 권리와 의무를 실천할 수 있는 정당한 지지를 요청해야 하며, 동시에 이러한 권리와 의무를 무시하거나 혹은 왜곡하는 정치적 탄압에 대해서는 저항할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기록과 아카이브는 당대의 정치적 의무와 권리로 부터 종종 기억 투쟁 혹은 기억 전쟁이라고 불리는 역사성의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과거 독재 권력의 시민 기억에 대한 조직적 은폐와 강요는 공적 영역에서보다 민간 영역에서 더 은밀하게 이루어져왔다는 역사학적 주장에서 나타나듯(전진한, 2017) 공적 영역에서 은폐된 기록들이 민간의 일상 영역에서는 선택적이고 파편화된 기록으로 종종 남겨져 있기 때문이다.

자유주의 전통이 시민의 권리에 대한 강조했다면 공화주의적 관점은 시민권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시민의 권리보다 오히려 의무, 즉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에 대한 의무를 강조한다. 즉, 시민의 지역적 참여를 강조하는 능동적 시민성과 시민의 공동체적 의무가 중요하다. 때문에 공화주의적 시민성은 국민국가 내부에 존재하는 구체적이고 실질적 장소들, 적극적이고 자율적인 주체가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들, 즉 공동체가 실존하는 지역의 센터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조철기, 2016). 이러한 장소들은 공식적인 자발적 조직, 시민 센터 또는 다양한 로컬 공동체가 활동하는 실질적 장소가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시민사회와 시민권이 다양한 집단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는 가정을 강조하면, 어떤 집단의 가치를 공통의 시민적 가치로 보아야 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특정한 집단의 이해관계가 우리 사회 모두의 정의와 동일시될 수 있는가. 이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공통된

동의를 끌어내는 것은 새로운 도전이 된다. 왜냐하면 종종 특정 집단의 가치를 포용한다는 것은 다른 집단의 가치를 배제하거나 억압하는 것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하버마스는 사적이익보다 공공의 이해관계를 우선시하는 사람들이 참여를 강조하는 '담론적 공공영역(Discursive public sphere)'을 제안했다.⁸⁾ 공론영역에서 끊임없이 시민들은 공공의 선과 시민의 덕성에 관해 논의했는데, 시민의 기록과 아카이브는 공론영역을 활성화시키는데 긍정적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노명환은 「공론장으로서 기록보존소의 역할: 그 역사화 현황, 패러다임 변화와 미래 발전방향」에서 시민들의 자유로운 토론을 보장하는 영역에서의 기록과 아카이브의 역할에 대하여 논의를 했다(노명환, 2014). 그에 따르면, 기록보존소는 공론장에서 시민의 덕성과 사회적 이해관계에 관한 공통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에 기록과 증거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끊임없이 영향력을 끼쳐왔다. 즉, 아카이브는 특정 이해관계나 권력 수단으로 이용되는 대신 시민들의 목소리와 의견을 담아내는 공론장을 활성화하고 긍정적으로 강화하는 역할을 하는데 공론장에서 아카이브는 잘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역사적인 사건과 과거의 의견, 의사결정 과정 등을 증거화하여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 기록을 통해 시민의 의견을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시민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방법으로 공론영역에서의 기록은 시민 민주주의를 확립시키는데 기여한다.

8) 하버마스 덕분으로 공공 영역의 이론이 정리되었다고 보는데, 하버마스는 시민사회 내 지배 관계를 드러내는 맑스주의 전통과 개인적 자율성의 수호에 있어 시민사회의 역할을 강조하는 자유주의 전통을 결합시켰다. 그는 의사소통적 행위(communicative action), 담론민주주의(discursive democracy), 생활세계의 식민화(colonization of the life world) 등과 같은 일련의 이론적 구조물을 통해 상이한 이론적 논의들을 하나로 정리해내었다는 평을 받는다(Edwards, 2018).

3) 문화적 시민권과 시민기록관리: 포스트모던적 관점

시민권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영역으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등장하면서 1966년 『국제인권규약』에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로 시민권의 범주가 명시되었다. 여기서는 시민권이 법적인 권리 뿐 아니라 가족 및 개인사생활의 보호, 지적 활동의 자유, 정치적 활동 및 노동단체 활동의 보호, 경제적 활동의 보호 등으로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출산, 육아, 건강, 교육과 연계되는 광범위한 사회적 권리 등에 기초한 사회문화적 권리가 있으며, 구체적으로 가족에 대한 보호권, 결혼에 대한 권리, 가족생활의 존중에 대한 권리, 아동의 권리, 명예 및 신용, 사생활에 관한 권리, 주거와 통신의 권리, 사상, 양심, 종교의 권리, 의견, 표현, 정보전달의 권리, 집회의 권리와 결사 및 노동 단체의 권리 등 광범위한 범주가 여기에 속한다(장미경, 2001). 즉, 단순한 법적인 권리에 대한 이해 뿐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시민의 권리가 적극적으로 보장될 때에 노동계급이나 여성주의자들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의 실현이 실질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여성주의자들은 시민권의 범주에 여성의 존재와 여성의 신체에 관한 권리, 재생산권, 성적 선택의 권리, 가족 권리 등 이 시민권 안에 추가되어야 실질적으로 시민의 정치적 권리 주장이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장미경은 기든스(Anthony Giddens)를 인용하여 생명생산과 관련된 모든 권한들이 좀더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러한 시민권에 대한 관점은 시민권이 국가가 시민에게 부여하는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주장했던 과거 국가로부터 일방적인 위로부터 부여받는 권리라는 개념으로부터 아래로부터의 권리로 점차 이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포스트모던 시민권이라고도 부르는 이러한 시민권의 영역은 국가 정체성보다 사회적, 문화적 정체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다양성

과 차이를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하여 종종 다양한 집단들이 시민으로서 정체성을 만들어내고 유지하는 데 어떠한 기제들을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인다. 지역이라는 공간이 시민으로서 정체성과 소속을 유지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그리고 로컬 공간이 어떻게 저항의 장소로 사용될 수 있는지 등에 관한 이슈들이 포스트모던 문화적 시민권의 핵심화두가 되기도 한다. 조철기는 폴 잭슨(Paul Jackson)을 인용하여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논의는 과거 제도화된 법적, 정치적 권리로서의 시민권에 대한 논의보다 훨씬 더 감성적이고 정의적인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조철기, 2016). 그러면서 “이러한 사회문화적 접근은 시민성이 정치적 활동에 참여하는 것보다 오히려 일상적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에게 의해 (시민권이) 어떻게 수행되는지를 이해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인다고 말한다(조철기, 2016). 즉, 일부 사람들은 정치적 저항이나 행동을 통해 시민성을 주장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시민권은 일상생활을 통해 그 의미를 드러낸다는 것이다. 때문에 우리 시대 시민권은 이웃, 공동체, 공적 장소, 상이한 제도들에 내재되어 있으며 이러한 것들이 어떠한 상호작용을 거쳐 시민권을 강화해 나간다. 이러한 맥락에서 시민권에 대한 연구는 시청에서부터 계토까지, 공공 공원에서부터 사적인 저주지까지 도시에서 주변 공동체까지 시민들이 있는 곳 그 어디에나 존재한다(조철기, 2016; Painter and Philo, 1995 재인용)고 할 수 있다. 즉, 시민의 일상이 시민권이 작동하는 장소이며 일상에서 생산된 시민의 기록들은 이러한 내재화된 권력이 작동하는 방식을 드러내는 증거가 된다.

이러한 문화적 시민권의 확장적 관점, 시민의 일상이 시민권을 강화해나가는, 혹은 드러내는 장치라는 논의는 일상 아카이브와 일상 기록의 의미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국내 기록학계의 논의와 접점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2013년 이미 광진홍은 일상이 담고 있는 가치에 대해 언급하며, 일상 아카이브의 정의를 “보통사람들의 일상을 미세한 영

역으로 범주화하여, 개인 및 집단의 행위와 경험을 사회적 맥락에서 해석하고 아래로부터의 역사를 재구성하기 위한 장소”라고 말한다. 광견홍은 일상 아카이브가 한국 근현대사 전개 과정에서 나타난 보통사람들, 시민의 행위와 고통에 대한 기억과 기록을 재현해 내는 작업으로, 자본주의적 일상성 속에 숨겨진 억압적 구조를 밝혀낼 수 있다고 말했는데(광견홍, 2011), 이는 즉, 시민의 일상에는 시민권의 이상과 현실이 그대로 펼쳐져 있으며 그들의 만들어낸 기록에는 시민사회의 전면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점을 지적했다는 점에서 문화적 시민권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시민 정치와 시민의식은 그들이 발 딛고 있는 공동체와 장소, 지역과 일상에 미시적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문화적으로 시민권은 이러한 미시적 차원에서 스스로의 원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따라서 시민 아카이브와 시민기록은 미시적 차원에서 시민권의 작동하는 방식을 보여주는 증거이자 이들을 강화하는 도구적 성격을 가진다. 때문에 우리는 시민의 기억과 정체성, 시민의 권리와 주체성을 왜곡되지 않고 편협하지 않는 방식으로 행사하고 남겨야 한다. 이를 위해 다시금 시민 스스로가 자신의 일상을 기록하고 그것을 남기고 보존하는 것이 생활화되고 이것이 정치적 참여만큼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위에서 언급했듯 민간에서 생산된 기록이라는 의미에서 민간기록이라는 명칭은 기록 생산 주체인 시민과 시민권의 관점의 모든 풍부하고 복잡한 함의를 그대로 옮기지 못한다. 시민의 등장과 시민사회의 확장은 단순히 공적 영역이 아닌 것으로 정의될 수 없으며 시민의 일상을 담은 기록은 아무렇지도 않은 자질구레한 민속품이 아니다. 시민기록에는 그 시대의 시민권과 그것이 작동하는 방식이 함께 녹아 있다. 때문에 시민권의 확장과 변화는 시민기록의 확장과 변화와 궤를 함께하고 있다. 이것이 심지어 시민 의식이 부족하다거나 시민 정치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들의 기록마저도 시민기록이 아니라고 말하기 힘든 이유

이다. 왜냐하면 적극적으로 국가권력에 저항하지 못하거나 스스로의 자율적 목소리를 박탈당한 ‘서발틴’ 역시 기억주체이며 시민 기록은 그들을 둘러싼 일상 생활세계를 드러내기 때문이다.⁹⁾

4. 국내 시민사회 활동의 전개와 시민기록

우리가 시민의 권리로서 기록관리를 생각해볼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최근 확산된 공동체 아카이브와 마을 아카이브에 관한 관심이 다윈화된 시민 사회의 현상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2000년 이후 시민운동은 생활 정치 영역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되는데, 이러한 정치활동의 변화는 시민운동의 변화와 마을만들기, 그리고 마을 아카이브로 이어진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시민권과 시민기록의 관점을 실제 국내 시민운동의 경험에 적용해보고 나아가 현재 활발한 마을만들기와 결사체 시민단체의 기록관리에 대해 논의해 보기로 한다.

1) 시민 운동의 발전과 시민기록

전 세계적으로 1960년대는 국가, 시장, 자발적 결사체들의 확산이 급속하게 일어났던 시기라 할 수 있다. 통상 시민사회라는 단어에는 ‘제3섹터’나 ‘비영리 섹터(NGO)’가 주류를 이루고 가정과 국가사이의 모든 결사체(associations)들을 의미한다. 노동조합들, 정당들, 교회와 기타 종교단체들, 전문 집단들과 기업 내 조직들, 공동체들, 사회운동들과 독립 미디어들이 모두 여기에 포함된다. 정치학자 마이클 왈처(Michael

9) 기억주체로서 서발틴에 대한 논의는 임지현의 2002년 당대비평 특별호 「기억과 역사의 투쟁」을 참고할 수 있다. 여기서 임지현은 기억투쟁에 대한 국가권력과 시민사회의 대립을 상정하며 여기에는 서발틴도 포함된다고 언급한다(임지현, 2002).

Walzer)는 이것을 ‘비강제적인 인간 결사의 공간’이며 이 공간을 ‘관계적 네트워크들의 집합’이라고 부른다(Edwards, 2018). 국내 시민사회가 결사체를 형성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라 할 수 있으며 1987년 이후에 결사체주의는 본격적 시민운동으로 급속하게 성장하기 시작했다¹⁰⁾. 한국은 60년대 이후 국가주도의 급속한 근대화를 경험하면서 경제성장을 이루었고 정치적 민주화와 함께 결사체의 확산, 즉 시민단체의 성장이 이루어졌다. 때문에 한국의 시민 사회는 서구에 비해 정치적 성격이 강하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등장한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활동은 이러한 한국 시민사회의 정치적 특징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박상필, 2015). 민주화 운동으로 대표되는 학생, 노동자, 언론인, 예술가, 종교인들의 시민 저항운동은 권위주의적 정부와 대립적 관점에서 방어적이고 비밀결사적인 시민운동을 수행했고 오랜 기간 권위주의 정부에 맞선 의정 감시와 선거 감시 등의 정치 사회적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성장하였다.

여기서 시민운동은 사실상 민중운동, 노동자민중운동이나 사회운동과는 구분될 필요가 있다. 시민운동은 독재정권에 맞서는 민주화 운동의 과정에서 새로운 형태와 내용을 갖춘 운동으로 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이전의 농민이나 민중 운동과는 다른 방식으로 분화되기 시작했다(정병기, 2013). 임혁백 역시 1987년 6월 항쟁으로 권위주의 시대의 법과 제도에 제동이 걸리면서 시민사회는 자율적이고 독립적 조직으로 급격히 변화했다고 주장한다. 영남대 정병기는 이러한 변화가 1987년 6월 항쟁이후 정치적 민주화의 확장으로 언론의 지형이 변화하여 국내

10) 미국에서는 1960년대 10만 개의 결사체가 등장한 이후 1970년대와 80년대를 거치며 현재 약 150만개의 비영리단체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 세계적으로 2007년에 브라질에 22만개, 이집트에 2만4000개, 대만은 15000개의 NGO가 있다. 국내에도 2020년 행안부에 따르면 3041개에 해당한다. 텔은 결사체, 특히 시민 결사체들의 덕(virtue)을 부각시키고 이들이 민주주의적 역할을 담당할 것을 강조한다. 이러한 사상을 이어 받은 퍼트남은 결사체들이 사회적 협력, 사회적 신뢰 그리고 사회적 자본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점을 주장했다(Edwards, 2018)

공론형성의 기회가 확장되고, 1980년대 동구 사회주의 몰락으로 인해 야기되었다고 분석한다. 이러한 국내 정치적 토대의 변화와 국제 정세의 변화가 사회주의적 민중운동의 변화를 가져왔고, 이들과 별개의 노선을 지향하는 시민운동이 등장하기 시작했다(정병기, 2013).

1990년대 이후 국내에서 이러한 시민결사체 조직은 사회의 거의 모든 부분으로 확장되었다. 이에 따라 정치적으로 시민사회의 자율성이 확보되면서 시민운동의 활동범위가 다양화되었다(임혁백, 2006). 경실련과 참여연대를 비롯하여 환경보호, 여성 권리의 신장, 사회복지 증진, 교통문제 해결, 바른 언론을 위한 시민감시, 소비자 보호, 공정한 선거 지킴이, 외국인 노동자 보호 등의 이익단체들이 광범위하게 조직되었다. 그리고 특히 2000년대에 들어서며 시민사회에는 생활정치, 혹은 복지 서비스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NGO의 활동이 확연히 증가했고 다수의 시민 단체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 기업 등 다양한 풀뿌리 운동으로 변했다고 보고된다.

이러한 시민 단체들은 사실상 일상적으로 스스로 존립과 주창활동을 위해 기록을 생산한다. 시민 활동을 증거하고 의제를 드러내기 위해 기록을 수집하고 관리하고 보존하는데, 기록을 남김으로써 스스로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보장하고 시민 단체가 추구하는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운동을 기억한다. 이훈창에 따르면, 시민 단체에서 생산하는 기록물의 경우 실천적 측면에서의 의제 운동의 기록화 성격이 강하다는 특징을 가진다. 즉 시민운동의 목적이 공공선과 좋은 사회를 만드는 활동에 초점이 있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운동을 기억하기 위해서 시민들은 자신의 기록을 생산하고 조직하며 보존할 필요를 절감하고 있다는 것이다(이훈창, 2021).

이러한 시민단체의 기록들은 민간기록으로 불리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시민기록이라고 명명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사실상, 시민 단체와 그들이 생산한 기록은 시민사회의 특징과 우리 사회의 시민성을 보여

주는 핵심적인 기록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현재 시민활동의 증거로서 시민 단체에서 수집, 관리하고 있는 기록물로인 여성, 환경, 자원봉사, 인권 등 다양한 주제와 세월호 참사, 4대강개발사업, 제주 강정마을, 원자력발전소와 밀양송전탑 건설, 1997외환위기 일본군 성노예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시위 등의 우리 사회의 단면을 드러내는 주요한 사건들에 대한 기록물이 아카이빙 되어 있다(이훈창, 2021). 즉 시민 단체의 기록에는 우리 사회의 고민과 운동들, 사회적 이슈와 해결방법을 증명하려는 사회적 시도들이 그대로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좋은 예로, 인권 단체의 기록을 들 수 있다. 시민기록으로서 인권 운동의 기록은 인권 단체의 기관 기록물이라기보다는 폭넓은 의미로 인권을 옹호하는 시민들 전체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한국의 인권운동은 단체, 개인, 당사자들이 인권과 관련된 활동에 개인적으로, 그리고 집단적으로 참여한다는 특징을 가지는데, 이훈창에 따르면, 인권운동 단체뿐 아니라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개인들도 그 인권 활동의 안전에 따라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도 한다. 따라서 인권운동의 네트워크에는 인권단체 활동가, 피해 당사자, 시민사회 활동가 등 다양한 인적구성을 포함하고 있고,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인권운동 기록은 인권활동 단체의 시민단체의 기록과 그 소속 구성원 뿐 아니라 일반 시민 인권 옹호자가 생산한 기록들을 포함하게 된다는 특성이 있다(이훈창, 2021). 이러한 기록들은 시민 단체와 시민 개개인의 특정 사안에 대한 활동 기록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시민기록의 특성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시민단체, 혹은 제3섹터의 기록을 시민기록으로 부르고, 이들 시민기록관리를 시민의 의무로 활성화하는 것을 하나의 시민운동이자 시민민주주의의 시민권의 확장으로 이해할 수 있다.

2008년 촛불집회 이후 주요한 정점으로 사회적 경제영역의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 기업이 크게 성장하였다. 이는 시민운동의 차원

에서 한국 사회의 다양한 풀뿌리 조직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 기반의 영유아 보육, 아동교육, 도서관 활성화, 지방문화제, 지역 축제 등이 주요 안건이 되었는데, 이러한 공동체 활동은 시민사회의 자발적 활동과 지자체의 정책 지원사업으로 시작되었다. 특히 현재 마을공동체 활동의 경우 다양한 광역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 기본계획을 수립, 지원하는데, 특히 마을 공동체 활동은 적극적 주민참여와 자치적 가치 창출, 그리고 민관 협력을 기본 프레임으로 하고 있다. 이는 2008년 이후 시민사회와 정부지원이 협력적으로 이루어지며 지역 공동체의 생활 정치와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시민사회 활동은 1987년 6월 항쟁에 독재정치에 저항한 시민단체의 맥을 이어받았지만 과거의 경실련,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등의 주창활동을 하면서 정부를 견제하던 결사주의 NGO의 활동과는 구분되는 시민운동의 변화한 모습을 보여준다(유창복, 2015; 정연경, 2018).

2) 마을만들기 운동과 시민기록

권효림에 따르면 시민운동으로서 공동체운동, 즉 마을만들기운동은 토크빌의 ‘결사의 예술(art of association)’의 확장으로 이해할 수 있다(권효림, 2015). 이때 공동체는 전통적 의미의 친족중심의 공동체보다 시민참여와 사회적 연대를 중심으로 한 시민공동체를 의미하는데,¹¹⁾ 이는 로버트 퍼트남(Robert Putnam)의 시민공동체, 즉 능동적이고 공익지향적인 시민상, 평등주의적 정치관계, 신뢰와 협조를 지향하는 결사체

11) 근대적 시민사회의 한계에 대한 인식은 20세기 들어 다양한 이론적 검토로 이어졌는데, 크게 2가지 이론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시민사회의 한계를 공동체의 장점으로 보완하고자 하는 시민공동체론의 방향이었고, 다른 하나는 고전 시민사회 개념을 재개념화함으로써 시민사회론을 더욱 발전시키고자 한 방향이라 할 수 있다(강수택, 2006)

와 유사하다. 공동체를 구성하는 시민의 특징은 사적이익보다 공적 이익을 주장하는 데 관심이 있고 이에 적극 참여하는 시민성을 가지는 데 있다(강수택, 2006). 사실 공동체와 결사체를 분명히 구분하는 일은 쉽지 않음에도, 현재의 마을만들기는 시민들 간의 유대와 정서적 측면을 고려할 때 이러한 결사체의 일부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강수택, 2006; 김의영 외 2008).

서울시는 주민들의 관계망 회복과 시민들의 생활의제의 지원을 위해 2012년부터 마을공동체 정책을 시행했고 주민중심의 의제에 보조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마을공동체의 형성과 유지를 지원하고 있다. 시민들의 모임을 행정적으로 지원하여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개인들에게 연결망을 제공하고 스스로 일상에서 필요한 것을 자발적으로 해결하도록 돕고 있다. 사실상 이러한 마을만들기 공동체 운동은 서울시 뿐 아니라 현재 부산과 대구 등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는데, 이러한 활동들은 2000년대 중반에 오면서 주창활동 중심으로부터 공공서비스와 생활정치로 시민사회의 핵심역할이 바뀌었는데 공동체나 마을만들기 등은 이러한 시민운동의 또 다른 변화를 잘 보여준다(유창복, 2015).

2012년 서울시의 『마을공동체만들기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마을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 문화, 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 사회적 범주’로 정의된다. ‘마을 공동체는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지만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들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로 ‘마을공동체만들기는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으로 이해될 수 있다. 조계원은 이러한 마을공동체의 특징이 강한 친밀성과 동질성에 기초한 전통적인 공동체라기보다는 오히려 일상의 친밀성과 호혜성에 근거한 일상생활 속의 연대에 가까웠다고 분석한다. 그는 마을공동체를 일상의 정서적 친밀감의 바탕으로 개인이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복지문제, 사회적 서비스, 육아와

교육, 의료 등의 공적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결사체적 집단으로 묘사한다(조계원, 2020).

이러한 마을공동체와 함께 마을기록활동가, 마을아카이브 만들기 등의 활동이 활발하다. 공동체 아카이브에 관한 논의 역시 이러한 2012년 마을만들기운동과 관련이 깊다. 공동체아카이브는 지역공동체로서 마을공동체를 근간으로 공동체가 가지는 공통된 관심사와 경험, 안건들을 통해 공동의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기 위한 활동으로 소개되었다. 이러한 민주적 시민사회의 핵심 역할의 관점에서, 그리고 시민 결사체와 공동체의 관점에서 마을공동체와 아카이브 운동은 곧 바로 능동적이고 공익지향적인 시민공동체를 향한 시민사회의 실천의 문제가 된다. 즉, 민족, 계급, 젠더 등의 거대 담론이 아닌 육아, 안전, 교육, 구매, 소비 등을 통해 시민의 연대와 우애, 신뢰를 확인할 수 있는 로컬의 활동을 대표한다. 새로운 시민활동의 터전으로서 시민기록과 마을기록활동가, 마을아카이브는 이러한 시민성과 공동체성을 아우르는, 시민공동체를 키우고 증거하고, 강화하는 시민의 장소이다. 조계원에 따르면, 마을공동체 정책은 시민적 역량을 강조하며, 지원을 통해 이러한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조계원, 2020). 때문에 시민들 스스로 덕성을 쌓고 정치적 참여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는 것, 그리고 개인의 이기적 관심사를 넘어 공통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는 공동체 아카이브의 지향점이자 시민공동체 기록이 제공할 수 있는 자원이다. 이를 위해 마을마다 공론장을 만들고 활성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다양한 목소리를 생산하고 기록하고 남기고 관리하는 것이 시민기록이며 마을 아카이브가 된다.

마을공동체의 시민기록은 오래된 것 일수도 있고, 지금 막 생산된 것 일 수도 있다. 과거 지역의 풍경 속에서 존재하는 공통의 경험을 증정한 사진 일 수도 있고, 어제 마을공동체 구성원들이 치열하게 함께했던

회의록일 수도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마을의 시민기록은 팽건홍이 말한 관제기록과 대비된다, 즉 “정부기관의 민간기록 수집·관리는 대체로 특정 정책과 이슈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근거수집의 차원에서 행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것은 곧 수집에 앞서 의도적으로 편향된 전략을 수립하고 입맛에 맞는 기록만으로 구성하여 왜곡된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팽건홍, 2011).”라고 할 때 관제기록과는 정반대의 의미를 지니는 시민의 기억과 경험이라 이해할 수 있다. 공동체들은 그것이 생활정치이든 주창활동이든 자신들의 고유한 사적 관점을 지니고 있다. 때문에 지배질서의 영속화를 위한 정책과 그 증거로서의 기록과는 구분되는 가치를 가진다.

나아가 마을공동체와 아카이브가 과거 시민운동과 구분되는 또 다른 이유는, 공동체성이 근간으로 하는 친밀성과 정체성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공공선이라는 대의적 실천에 대한 견해가 일치할 때 결집력을 발휘하는 정치적 결사체와 달리 공동체는 정치적 요소에 기초한 동질성 이외에 오랫동안 공동의 관심사를 나누고 함께 성취하며 경험을 공유해야 가질 수 있는 정서적 유대감을 중시한다는 특징이 있다(조계원, 2020). 그러나 지역사회의 연대의식과 소속감, 정체성은 한순간에 쉽게 쌓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친밀감과 동질감을 느끼도록 하는 연결망을 쌓을 수 있는 지속적인 문화적 기제를 필요로 하는데, 마을의 시민기록과 마을 아카이브는 이러한 의미에서 그 이러한 긍정적인 정체성 형성과 구성원들의 정서적 유대감을 강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손동유는 마을 아카이브를 자기 역사, 가족사의 기록화를 마을공동체 내에서 진행하고, 이를 소통하는 방법으로 문서화, 시각화, 구술 등의 형태로 만들어진 기록을 공동체 구성원 간에 아카이브로써 공유하는 것은 현대인들의 상실감과 심적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고 말한다(손동유, 2013).

다시 말해, 마을공동체와 마을아카이브 운동, 그리고 마을의 시민기

록관리는 결사체주의의 관점에서 시민민주주의를 증거하고 강화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는 단순히 투명한 시민사회를 위한 기록관리의 설명 책임 의무를 넘어선다. 즉, 공동체와 마을아카이브는 시민으로서의 정체성, 시민적 소통을 가능케하고 시민으로서 정체성을 강화하며 시민적 우애를 도모하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이러한 마을아카이브 혹은 마을기록, 공동체기록 역시 시민기록의 중요한 한 범주며 시민기록으로서 공동체 기록은 시민의 정서적 연대를 강화하고 뿐 아니라 시민의 권리 보호와 공익 충족을 위한 공동의 의사결정과정을 증거한다는 점에서 시민 기록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5. 나가며

전 서울기록원 조영삼 원장은 2021년 「국가기록원의 민간기록관리에 관한 정책연구」 인터뷰에서, “민간기록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은 시민의 일상에서의 기록이 자연스럽게 생산되고 축적되고 함께 공유되고 보존되는 것이 마치 강물이 흐르듯 익숙하게 끊이지 않고 이어지도록 하는데 초점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는 공공이 아닌 민간에서의 시민기록은 우리 삶의 저변에서, 우리가 인지하든 혹은 그렇지 않든, 우리 삶이 지속되는 한 끊임없이 생산됨을 의미한다. 이에 시민기록은 시민의 삶의 일부가 되며, 이는 시민에 의한, 그리고 시민을 위한 기록관리가 추구하는 지점이다.

본고는 시민의 정의와 역사적 함의를 살펴보고 시민의 기록이 가진 의미를 재조명하고자 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서구의 시민사회 이론을 일부 소개하고 시민의 사적 영역에서 생산된 기록이 가지는 의미를 점검함으로서 현재 민간기록으로 불리는 기록의 특징과 의미를 검토하였다. 민간기록은 사실상 민간 영역에서 생산·관리되어 온 시민기록이

라는 표현이 더 적합해 보인다. 이러한 관점에서 민(民)이 가지는 의미를 변화와 시민(市民)이 가지는 정치사회적 역할을 검토하고 시민기록이 민주주의 사회의 가치와 시민의 권리 이해되어야 한다는 점을 논의하였다.

〈참고문헌〉

- 김의영, 한주의, 2008. 결사체민주주의의 실험: 성미산 지키기 운동과 마포연대의 사례, 한국정치학회보 42(3), 143-166.
- 권효림, 2015. 결사체주의 관점에서 본 '마을공동체 만들기'의 민주주의적 이아: 마포파티(Mapo Party)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9(5), 151-180.
- 곽건홍, 2011. 일상 아카이브(Archives of everyday life)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소론, 기록학연구 29, 3~33.
- 노명환, 2010. 공론장으로서 기록보존소의 역할: 그 역사와 현황, 패러다임 변화와 미래 발전방향: 역사학에 주는 시사점을 중심으로, 서양사론 110, 97-121.
- 장하리, 2022. 「시민기록의 꽃」 청주 시민기록관 개관, 뉴스로. (2022. 12.22).
- 박상필, 2015. 한국시민사회의 변화와 새로운 역할 NGO 연구 10(2), 35-68.
- 설 한, 2015. 다원주의 사회의 민주적 시민권, 21세기 정치학회보 25(4): 87-110.
- 손동유, 이경준, 2013. 마을공동체 아카이브 활성화 방안, 기록학연구 35: 161-205.
- 장미경, 2001. 시민권(Citizenship) 개념의 의미 확장과 변화: 자유주의적 시민권 개념을 넘어서, 한국사회학 35(6), 59-77.
- 전북대학교, 2021. 민간영역 기록관리 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 용역보고서, 행안부: 국가기록원.
- 전진한, 2017. 기억의 정치학을 넘어 기억의 문화사로: '기억'연구의 방법론적 진전을 위한 제언, 역사비평 119(여름), 379-452.
- 정상호, 2003. 시민사회 연구의 과제: 공익적 시민운동을 넘어서, 경제와 사회 60(겨울), 175-194.
- 정상호, 2013. 시민의 탄생과 진화: 한국인들언 어떻게 시민이 되었나? 한림대출판부.
- 정병기, 2013. 한국 시민운동의 흐름과 '시민성', 진보평론 55(봄), 14-31.
- 정세근, 2022. 사람의 뜻(3): 국민, 시민, 민중, 인민 등의 개념과 용례, 동서철학연구 103, 381-402).

- 정양수, 2022, 평택시 시민기록활동가 양성과정 모두 마쳐, 열린뉴스통신(2022.11.14.).
- 정연경, 김태영, 2018. 마을공동체와 사회경제통합지원센터 운영과정의 쟁점과 과제, 도시행정학보 31(3), 127-152.
- 조계원, 2020. 공화주의 관점에서 본 시민정치: 마을공동체 사업의 이론적 배경을 중심으로, 비교민주주의연구 16(2), 222-248.
- 조철기, 2016. 새로운 시민성의 공간 등장: 국가 시민성에서 문화적 시민성으로, 한 국지역지리학회지 22(3), 714-729).
- 조청현, 2006. 혁명력 2년 메시도르 7일(1794년 6월 25일) 기록보존에 관한 법령 연구: 의회 문서보관서에서 국립문서보관소로의 진화과정에 대한 연구, 기록학연구 14, 289-322.
- 최장집, 2009. 『민중에서 시민으로: 한국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방법』(돌베개: 서울).
- 이나미, 2014. 현대 한국의 민(民) 개념: 국민 민중 시민개념을 중심으로, 한국 동양 정치사상사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자료집, 107-129.
- 이지성, 2021. 근대 ‘국민’·‘인민’·‘백성’의 개념사 연구: 19세기 말: 20세기 초를 중심으로, 어문논총 39, 59-83.
- 이창훈, 2015. 마을공동체 정책과 지역사회 시민생태계: 서울시 마을공동체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도시행정학회 2015년 하반기 학술대회, 57-65.
- 이훈창, 2021. 시민사회단체 기록의 생산방식 변화와 몇 가지 제언: 인권운동 기록을 중심으로, 디지털문화아카이브지 4(1), 97-113.
- 임혁백, 2006. 시민사회, 정치사회, 민주적 책임성: 민주화 이후 한국 시민사회의 정치개혁 운동, 한일공동연구총서, 15, 45-92.
- 임지현, 2002. 기억과 역사의 특징, 당대비평 특별호, 420쪽.
- 엄범희, 2021. 익산시, 기억이 기록되는 시민활동가 육성, 익산신문 (2021. 9.10)
- 여관현, 2013. 마을 만들기를 통한 공동체 성장과정 연구: 성북구 장수마을 사례를 중심으로, 도시행정학보 26(1), 53-87.
- 유창복, 2015. 마을공동체 정책과 지역사회 시민생태계: 서울시 마을공동체정책을 중심으로, 전국도시행정학회 2015년 하반기 학술대회 정책세미나: 마을공동체 정책과 지역사회 시민생태계, 57-65.
- 윤은하, 2022. 국내 민간기록관리의 체계 수립을 위한 정책 방향성 연구, 기록학연구 72, 5-32.
-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2014. 시민의 탄생과 진화: 한국인들은 어떻게 시민이 되었나, 시민과 세계 24, 276-310.
- 홍인철, 2019. 전주의 기억, 시민의 삶... 시민기록관 10일 개관, 연합뉴스 (2019. 12.2).

Edwards, M. Civil Society 3rd Ed. Polity Press: Cambridge, 서유경 옮김, 2018. 시민
사회 (제3판), 명인문화사: 서울.
Posner, Mark, 1972, Archives in the Ancient World, Havard Univ. Press; MA.